| | |
|---|---|
| **수 신** | 각 언론사 사회부 |
| **발 신** | 민변, 민주노총, 진보네트워크센터, 인권운동공간활, 진보연대, 참여연대, 천주교인권위원회(담당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-723-0666 pil@pspd.org) |
| **제 목** | [보도협조요청서] <긴급진단>좌담회 “온국민이 다 털렸나?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” 개최 |
| **날 짜** | 2016. 3. 25 . (총 2 쪽) |

# 보 도 협 조 요 청

## <긴급진단>
## 좌담회 “온국민이 다 털렸나?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” 개최
### 일시 및 장소 : 2016.3.29.(화), 오전 11시,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

1. 취지와 목적

- 지난 3월 2일 테러방지법 통과로 정보수사기관의 국민사찰,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.
- 게다가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한 가입자의 통신자료(인적사항)가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되었다는 국회의원, 언론기자, 노동운동가 및 일반 시민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
-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임에도 이통사들의 경우 수사기관이 “수사상 필요”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에 근거해 제공을 요청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제공해 왔음
- 최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2012~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됨. 한해 천만건 이상이 제공된 셈이며 국민 5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셈
- 이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이후 법적대응,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

-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<긴급진단 >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 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, 발표할 예정.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,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

## 2. 개요

○ 제목 : <긴급진단> 좌담회"온국민이 다 털렸나?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무단수집 진단과 대안"

○ 일시와 장소 : 2016년 3월 29일(화) 오전 11시, 참여연대 느티나무홀

○ 주최 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민주노총, 진보네트워크센터, 인권운동공간활, 진보연대, 참여연대, 천주교인권위원회 /시사인, 한겨레 공동주최

○ 참가자

- 사회 : 고제규 시사인 기자
- 토론

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
장하나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
방준호 한겨레 기자
이승철 민주노총 부총장
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
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(변호사)
양홍석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(변호사)

○ 문의 : 참여연대 02-723-0666 /

## 3.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 끝.